

규격서 및 공급조건

장비명	Item No.	정부물품 분류번호	품 명	단 위	수 량
(중고) 스펙트럼 분석기	1	4111530301	스펙트럼 분석기	Set	50

1. 장비의 개요 및 특징 (Features)

- 1) 국가기술자격 실기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파형 분석기의 동작 및 기능이
출고시와 동일한 수준의 계측기를 기본으로 한다.
- * 인증받은 기관으로 부터 발행한 교정성적서를 필히 제출
- 2) 외형상 변형이나 파손이 없고, 디스플레이 변색이 없는 정상 장비
- 3) 생산년도 기준 2015년 이후 중고 스펙트럼분석기
- 4) 조작버튼이 동일 압력으로 작동
- 5) 출고 시 제공되는 기본 측정 옵션 내장
- 6) 휴대용 계측기로 배터리 정상 동작(방전시간 : 신제품출고시와 동일)
- 7) 입력 포트 N-type
- 8) 스펙트럼분석기, 충전기, 전원케이블, 가방을 1세트로 구성

2. 제품규격

항목		사양
Frequency Range		100 kHz to 4 GHz
Frequency Reference		±0.05ppm(Aging : ±0.05 ppm/year)
Frequency Span		0 Hz, 10Hz to full span
Resolution Bandwidth		1 Hz to 3 MHz [Accuracy ±10%(nominal)]
Video Bandwidth		
Single Sideband Phase Noise	Fc 1 GHz, RBW 10 kHz, VBW 1 kHz, RMS detector	30 kHz < -90 dBc/Hz
		100 kHz < -95 dBc/Hz

		1 MHz < -102 dBc/Hz
Measurement Range		DANL to +20 dBm
		Input attenuator range 0 to 50 dB, 5dB steps
Maximum Input Level		Average continuous range +20 dBm
		DC voltage ±50 V DC
Size	W x H x D	300mm x 200mm x 90mm (이하)
Weight		4.5 Kg (이하)

3. 공급조건

- 1) 계약자는 동일 제조사의 동일기종으로 구매수량만큼 납품 한다
- 2) 계약자는 기기별 교정성적서를 제출 해야 한다.
- 3) 계약자는 장비 모델명 및 일련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
- 4) 계약자는 규격서 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만 납품 한다.
- 5) 계약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6) 입찰참가자는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4111530301(스펙트럼분석기)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
- 7)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을 성능검사 후 1년으로 한다
- 8) 검수 장소 :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 KCA ICT자격본부
- 9) 납품 장소 : 발주기관 지정장소(붙임 참조)
- 10) 기타사항 :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
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(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-307, 2018.8.31.) 이어
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
· 보호의무를 준수하고,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.

4. 지방본부별 배부 수량 및 주소

구분	수량	납 품 주 소	연락처
ICT자격본부	21	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ICT자격본부 검정관리팀	061-350-1642
서울본부	4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IT벤처타워 서관 2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울본부	02-2142-2024
북서울본부	4	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0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	02-3151-9900
부산본부	4	부산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	051-440-1042

경인본부	3	(21558)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7 현대해상빌딩 4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	032-442-8701
충청본부	3	대전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24(탄방동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	042-602-0132
전남본부	3	광주시 서구 운천로 2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	062-383-5070
경북본부	2	대구 수성구 청수로 6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	053-766-9001
전북본부	2	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27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	063-244-1116
강원본부	2	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5-1 2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	033-732-8501
제주본부	2	제도 제주시 중앙로 265 성우빌딩 7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본부	033-732-8501
합 계	50		

5. 기타

- 1) 납품은 동일 제조사의 동일 기종으로 한다.
- 2) 납품된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입고하고 외관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검수
필 한다.
- 3) 납품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<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>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, 공정한 거래·상생문화를 정착·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.

- (1)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·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.
- (2)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, 사업기간 연장,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,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3) 사업의 특성,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'간접비'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4)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5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, 민원해결,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6) 천재지변,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7)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·자료·물건 등의 소유·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,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9)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, 분쟁조정신청,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0) 계약해제·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,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,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1)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- (12)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,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,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,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또는,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,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,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,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(13)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.
- (14)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.
- (15)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.
- (16)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,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,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<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>
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계약서 교부의무, ▲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, ▲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
- ▶ 하도급업체에 대한 ▲부당한 거래조건(특약) 설정, ▲하도급대금 부담 결정·감액, ▲부당한 위탁취소, ▲부당 반품, ▲기술자료 부당 요구, ▲기술유용, ▲경영간섭, ▲보복행위 등

- (17)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·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,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(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)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.
- (18)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·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